"尹정부 '전북홀대' 두고볼 수 없다"

민주 이춘석 의원, 전북 찾아 도민께 "함께 싸워달라"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가 도를 넘었다며, 우리나라에서 전북을 버리기로 결심한 것처럼 느껴진다며 비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본보 7월 17일자 3면〉

이 의원은 "그동안 예산확보에 손 놓고 있었던 전북 국회의원,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들까지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통렬히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하고,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한 전북의 4선 국회의원으로서, 본인부터 반성하고 도민들께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 주택 등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의원들에게 인기 있는 상임위 중 하나라서 국토교통위에 왔다."며, "국토교통위에서 자신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 몫을 제대로 챙기겠다는 일념으로 국토위에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 '전북 홀대'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주 국토부 업무보고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 사업만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보고 당시 "장관은 자료를 축약하다 보니 빠진 것 같다며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했다.

이 의원이 "전북 사업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요구에 "국토부가 일주일 만에 떠밀리듯 가져온 사업 목록은 처참한 수준으로 올해 국토부의 전북 신규 사업 달랑 6건, 19.8억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향후 추진 중인 전북 사업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도 '전북 홀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가만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국토부의 상황이 이러한데, 다른 분야는 어떠할지 안 봐도 알 것 같다."며, "전북 국회의원으로서,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이렇게 기자들에게 현재 전북이 처한 상황을 더욱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함이며,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에 힘을 보태주시고, 이 문제를 깊게 파고들어 계속 공론화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제부터 제 의정활동의 목표는 지역 사업 한두 개를 따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전북 홀대와 전북차별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한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중·김정수 전북자치도의원이 배석해 힘을 보탰으며, 이 의원은 중진의원으로서 큰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1963년 익산 출생으로 남성고와 한양대 법학과 졸업 후 원광대 대학원에서 법학과 석사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사법고시 30회에 합격한 변호사로 18대, 19대, 20대 연속으로 당선됐으며,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했고, 국회사무총장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2대에 익산갑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4선 중진의원이다.

/이만호 기자

"대통령 공약 空約돼선 안돼"

〈공약〉

강태창 도의원, "대선공약 추진 부진한 상태서 민생토론회 통한 약속도 기존 사업 재탕에 불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시 1)은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18일 윤석열대통령의 민생토론을 거론하며, "지난 대선 때 했던 대통령 공약이 25조9,000억원인데,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민생토론 시 거론한 약속들 또한 기존 대선공약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어떤 정책이든 정권마다 부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심을 잘 잡고, 약속한 내용들이 실행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호남권 광역화 문제와 관련해, 전라북도가 광주·전남에 예속되어 겪었던 불합리함을 탈피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는데, 자칫 호남권 광역화 문제로 도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개념정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청년정책과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실행하기보다는 당장의 성과를 위해 땜질식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장의 성과보다는 고기잡는 법을 알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시대 흐름에 맞는 조례 정비가 필요함에도 소관부서의 관심 부족으로 그 속도가 더디다."며, 이에 대한 개선과 세계적 과제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탄소 중립에 대해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전 부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발로뛰는 현장의정 '주목'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지역 현안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주생면 중동리 요천생태습지공원에 새롭게 조성된 '남원 그린 파크골프장'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소통하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이동 약자와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확충되지 않음에 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민원이 제기된 후에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민원에 따라 곧바로 시 관계부서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현장을 방문 확인하면서 주차장과 인도의 경계 평탄화 작업, 손잡이 설치 등 이동 불편을 해소했다.

이숙자 의원은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때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며, 향후 재시공으로 인한 재정낭비의 사전 방지를 당부했다.

향후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활동 지속을 약속하며, "현장에 나와 빠르게 민원을 해결한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카카오테크 부트캠프 교육생들과의 대화

지난 19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서울 판교 소재 카카오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 시설인 '카카오테크 부트캠프'를 방문해 교육시설을 꼼꼼히 살피며 교육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민간 폐기물 소각장 추진 즉각 중단해야"

윤수봉 전북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 1)은 지난 19일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지난해부터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해당업체가 지난 5일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며 사업장 허가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라면서,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 교육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현재 한 민간 업체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만 5천㎡ 규모에 한 민간 업체가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업체가 들어서면 1일 기준 폐기물처리량은 약 193톤으로 이 가운데 30%는 폐농약이나 폐페인트 같은 유독성 지정폐기물이다.

해당 업체가 처리하는 연간 폐기물의 양은 약 6만 9,000톤으로 완주군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약 7,700톤이라는 점에서 완주군 폐기물의 약 9년 치를 연간 처리하는 셈이다.

윤수봉 의원은 "해당 지역은 인구밀집 지역으로 최근 개발된 삼봉 신도시(약 6,000가구)와 둔산리(약 6,300가구) 등에 매우 인접해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교육권까지도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라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폐기물처리 소각장을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유감 표명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유희태 완주군수가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생활권 보장을 이유로 사업의 당위성 부족과 주민 반대의견을 이미 환경청에 전달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탄소중립, 인류 생존 문제와 직결"

한정수 전북자치도의원, 도 기획조정실 산하 '탄소중립추진단' 설립 제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이 지난 19일 제41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탄소 중립의 문제는 인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에 도내 특정 부서의 과제로 한정할 것이 아닌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한정수 의원에 따르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2030년도 전북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치는 43%로, 국가 목표 40%보다 3%나 높게 설정된 상태다.

전국 시·도별 탄소배출 비중의 경우에도 2010년 2.42%, 2015년 2.61%, 2020년 2.83%로 지속적 증가세다.

이와 관련해 도 정질문 등을 통해 개선 노력을 촉구했지만, 현재까지 전북자치도의 관심과 개선 노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한정수 의원은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근 심각한 민생문제인 기후변화, 경기침체 등의 경우에도 결국 탄소중립 문제의 연상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탄소중립 문제를 단순 환경 이슈로 바라볼 것이 아닌 모든 행정서비스 영역의 기본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탄소중립과 관련된 도 차원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획조정실 산하에 실과 단위의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한정수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집행부의 정책 개발 및 조정 기능을 총괄하는 만큼, 탄소중립추진단의 신설을 통해 도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의 구현 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 직속기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19일 제412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의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학생과 주민들이 사용하는 교육문화관 시설은 안전관리가 필수"라면서 "지난 전반기에도 지적했고,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시설관리 인력 부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업무보고 자료의 내용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라면서, "보고자료에는 사업 예산 현황 등을 포함해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직속기관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각각의 문화관 특색사업들을 보면 지역별 차별성과 다양성 보다는 주로 학력증진과 관련한 비슷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면서 "앞으로 학생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구성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수영장 주말 개방에 인건비 문제 등 다른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필요는 있다."라면서, "수요자의 이용 편의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어려움과 문제점만을 이야기하기보다 적극적인 대안과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의회, 美 공무 국외 출장 성과 공유

전주시의회가 지난 18일 공무 국외 출장 성과 공유와 함께 시정 적용 방안을 찾는 '대시민 보고회'를 전주소통협력센터 1층에서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공무 국외 출장(1조) 단장인 송영진 의원과 부단장 이성국 의원 등은 출장 내용과 전주시 도입 과제에 관한 개별 정책을 제언했다.

출장단은 미국 국외 출장 동안 영화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 글로벌 영화 시설 벤치마킹, 전주 야간관광 특화 도시 콘텐츠 확충 및 발전 방향 모색, 마이스 시설 및 도시재생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전주 도시개발 방향 탐색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연구했다. /김재훈 기자

"예산확보 통해 산림·하천 재난피해 대비해야"

전북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9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지방하천의 유실 빈도 등을 들며 매해 발생하는 산림·하천지역의 재난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비봉면 폐기물 매립장 문제의 진행 상황을 묻고,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그 결과 이적처리를 주문했으나 그 처리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적 처리 과정에서의 신속한 예산확보와 주민들과의 원만한 소통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절차의 진행상황 공개를 촉구하며 완주군과 원만한 조율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3%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산업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정부기조에 무작정 따르지 말고 지역만의 위기의식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대책을 적극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자연환경복원사업과 관련해 시범 대상지로 익산 왕궁이 선정됐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북자치도가 환경청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을 통해 황폐해진 지역의 생태계가 온전히 복원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이나 하천의 제방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상황으로 현 피해지역의 복구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하천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과 관련해 지난 5월 음식물 처리시설 폭발사고로 안타까운 사망사고 발생을 들며 관련 감사내용의 확보와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음폐수 관련 허가 관청으로서의 관련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충분한 예산확보와 더불어 본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사업신청을 하지 못한 도민들이 많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만금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힘들게 국비를 확보하고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므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